海外通商情報

본란의 기사는 本會의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本會 國際部(TEL : 553-0941/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ITC, 일본산 개인용 워드프로세서 미 산업피해 최종판정

ITC는 '91. 8. 8 일본산 개인용 워드프로세서에 의하여 미국산업이 피해받고 있는 것으로 만장일치화 판정. 그러나 ITC 위원들은 사무실용 타이핑 시스템은 피해를 주지않는 것으로 판정했다.

이 판정에 따르면 관련 제품의 모든 수입품에 58.17%의 덤핑마진 부과. 뉴욕타임즈는 상무부 통계인용, 미국의 개인용, 사무실용 워드프로세서의 총 수입이 1억 1,100 만불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일본의 "브라더"사가 판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브라더"사가 현재 미국내에서 모든 휴대용 W/P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스미스 코로나"사는 "브라더"사가 개인용 전자타자기에 대한 반덤핑 부과를 우회하기 위해 테네시주 바레트의 미국공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도로 브라더사를 제소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예비판정은 8월 23일 예정).

2. 부시대통령, 소련에 최혜국 대우 부여 선언, 쌍무 통상협정안 의회에 제출

8월 2일, 소련 방문에서 돌아오자마자 부시대통령은 소련에 대하여 최혜국 대우(MFN)를 부여한다고 선언. 소련으로 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실제로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MFN 대우는 본 협정안이 미의회와 소련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 협정은 '90. 6월에 서명되었으나 지난 5월 새로운 이민법이 통과되기전까지는 소련이 MFN 허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왔다.

소련에 대한 MFN 부여는 자유이민에 대한 소련의 규제에 대응하여 1974년 이래 Jackson-Vanik 수정안에 의해 留保되어 왔다.

쌍무 통상협정은 양국에서의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파리 베른조약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쌍무협정 성안시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본 협정이 비디오카세트의 불법 복사에 대한 충분한 수입제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미국 영화제작 업체들이 반대하였을 때였다.

이 문제는 소련이 협상 종국에 보호조치의 강구를 확약함으로써 해결되었다.

법에 명기되어 있는 신속승인 규정에 따르면, 미의회는 60-90일내에 통상협정 승인결의 안에 대한 검토를 종료해야 한다.

미의회에서 2-3개월내에 통과되면 소련의회는 제반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얼마동안 소련의회가 조치할지 전망키는 어려운 상황이다. 협정안 자체에 대한 논란이 없더라도, 소련내의 상황은 전망하기 힘들다.

3. 바우커스 상원의원 신미·일 반도체 협정비판, 엄격한 시행 요구

8월 2일 열린 상원 재무위 국제무역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소위원회 의장인 막스 바우커스 의원(민-몬타나)은 일본과의 새로운 반도체 협정이 미국 수출업체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으나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바우커스 의원은 이전의 협정준수가 미흡했음을 이유로 일본에 대한 제재조치의 철회는 시기상조라고 불평하며 시장점유율 조사를 위한 일본 양식의 사용은 상징적 중요성 의미밖에 없는 기준치를 만들어 낼 뿐이라고 언급했다.

바우커스 의원은 "단순히 협정의 마무리만으로 성공이라고 단정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고 미국의 반도체와 건설 서비스의 수준이 실제로 증대할 때까지는 승리를 선언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며 반도체와 건설에 관한 보다 엄격한 협정의 시행을 일본측에 촉구하였다.

바우커스 의원은 상원에서 "무역협정 준수법" 주요 제안자임. 죠세프 매시, USTR 대표보는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일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쌍무현안이 감소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4. UR 내년까지 연장될 가능성

이달초 헝가리 방문중, 칼라힐즈 USTR 대표는 UR이 금년내에 종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UR이 EC의 농업개혁 정책에 대한 입장 표시의 지연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 힐즈의 발언은 UR 협상에서 그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그녀가 보통 낙관적 전망을 해온 것으로 보아 심각하게 받아 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협상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징후도 있다.

협상의 여러부분에서의 진전을 가로막아온 두개의 큰 노력인 브라질과 인도가 정부의 무역정책에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EC의 농업개혁에 관한 입장변화 움직임과 더불어 미국의 보다 큰 융통성의 징후가 보인다.

이외에도 UR은 경제블록화에 관한 관심증대로 그 중요성이 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사항으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UR 협상에서 덤핑이나 보조금 문제에서 어떠한 실질적 양보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임.

미국은 덤핑문제에 어떠한 "공공이익" 검증이나 Sunset 규정의 적용도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UR 협상 대표들은 "Life Cycle Cost Recovery"의 보다 융통성 있는 해석에 대하여 반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5. 하원, 무역협정준수법안 가결

미하원 세입위 무역소위는 7월 25일, 민간기업이 미국과 쌍무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협정이행여부를 미행정부에게 조사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협정 준수법안(HR 1115)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구두표결로 통과된 이 법안은 캐나다 및 이스라엘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수정되었다.

수정안은 무역소위 Gibbons위원장(민, 플로리다)에 의해 제안되었다. Matsui의원(민, 캘리포니아)이 지난 2월 제안한 이 법안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며 특히 미행정부는 '74년 통상법 301조 등 이미 무역협정의 이행여부를 감시할 충분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며 동법안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조간통상정보 제8권 제28호 참조).

6. 북미 3국, NAFTA 원산지규정 협상 방식에 합의

북미 3개국 협상대표들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원산지 규정을 기존의 미·캐나다 FTA를 기초로 하여 마련하는데 잠정합의한 것

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NAFTA협상의 진행은 지난 '88년 미·캐나다 FTA보다 훨씬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북미 FTA 원산지 규정과 관련, 무관세 적용대상품목의 원산지는 제품의 관세분류표(HTS) 변화에 따라 역내 자유무역지역에서 발생한 실질적 변형기준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민감분야의 경우 새로운 북미 부품조달비율 조항과 같은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데 이들 3국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한다.

협상관계자에 따르면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분야중의 하나인 자동차의 경우, 미행정부가 협상개시 이전부터 이 분야의 원산지 규정을 미·캐나다협정 수준(50%)보다 높이겠다는 의사를 의회에 통보한 바 있고 의회관계자들은 무려 75% 이상으로 수준으로 높이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관계자들은 60% 이상의 현지 조달비율을 미행정부가 고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50% 이상의 수준으로 높이는데 극구 반대하는 입장이며 멕시코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고 있다.

현재 원산지, 관세·비관세 장벽에 대한 시장접근 협상그룹은 여타그룹과 같은 보조를 맞추면서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협상의 윤곽은 8월 19일 개최예정인 3국 통상장관에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부품에 대한 현지조달 비율조항을 둘러싼 각국들의 논란외에, 난항이 예상되는 분야로는 멕시코 석유산업에의 참여문제, 미반덤핑 법규 개선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상진행 속도가 이전의 미·캐나다 FTA협상보다도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어 협상추진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멕시코 측이 국내 투자관련 법규개정이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환경보호국(EPA)이 멕시코의 카운터 파트인 SEDUE와 공동으로 마련중인 국경환경 계획안(Draft)의 발표는 당초의 7월 31일에서 9월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 EC, 유럽통화기구설립 움직임

EC가 EC중앙은행과 단일통화창설을 위한 중간단계로 오는 94년초 가칭 '유럽통화기구(EMI)'를 설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통화동맹(EMU)을 추진하고 있는 EC통화실무자들이 최근 내놓은 이 EMI안은 EC 12개국을 멤버로 하되 이중 선진경제국들은 97년초부터 중앙은행 창설에 가담하고 나머지는 여건이 성숙해질 때까지 EMI멤버로 그대로 존속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MI안에 깊숙히 참여한 벨기에의 베르나르 스노이 특사는 8월 2일 기자회견에서 97년초부터 EC중앙은행과 단일통화의 가동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EMU 추진에 멤버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EC 회원국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EC중앙은행의 중간형태인 EMI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EMI멤버에서 EC중앙은행멤버로 넘어가는 회원국들이 97년초부터 자국통화환율을 고정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단일통화(ECU)로 자국통화를 대치해 나가는 순서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97년부터 EC중앙은행 창설멤버로 참여할 수 있는 회원국들로 독일, 프랑스, 네널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이탈리아 등을 꼽고 이들은 중앙은행 창설후에도 EMI 멤버로 계속 활동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EMI가 EMU 최종단계추진을 위해 시장개입 협조, 환율감시, 역내 후진경제국들의 중앙은행 가입촉진 등을 그 업무영역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8. EC, 홍콩 및 중국산 소형 컬러TV에 반덤핑 관세 부과

EC이사회는 7월 17일 홍콩 및 중국산 소형 컬러TV(화면직경 15.5~42㎝)에 대해 각각 2.1~4.8%, 7.5%~15.3%에 달하는 반덤핑 확정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국별·업체별 확정된 반덤핑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홍 콩

—Tai Wah : 2.1%, Kong Wah and Cony : 3.1%

—Luks Industrial : 4.1%, Koyoda : 4.8%, Hanwa : 4.8%

—rlxk : 4.8%

중 국

—Jujian Hitachi : 13.1%, Huaquian Sanyo : 7.5%

—기타 : 15.3%

한편 EC는 한국산 소형 컬러TV에 대해 지난 90년 4월 28일부터 10.2~19.6%의 반덤핑 확정관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9. UR서비스 협상그룹, 각국에 MFN예외 조치 리스트 요청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그룹은 7월 25일 가진 회의에서, 오는 9월 20일까지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서 제외하기를 원하는 분야의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각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Jaramillo 서비스협상그룹 위원장은 각국들이 제출할 이 리스트는 향후 협정의 골격이 어떻게 마련될지를 명확히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그 예로 현재 미국은 협정내에 해상서비스 및 항공수송분야를 포함시키자는 일부 국가의 제안에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Jaramillo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북구국가들이 해상운송에 대한 새로운 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동분야가 협정안보다는 분야별 부속서에 포함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전체 텍스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GATT소식통에 의하면 북구국가들은 9월 19일로 예정된 해상운송분야에 대한 서비스협상 그룹회의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심의될 수 있도록 새로운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10. 프랑스, 한국산 카라디오·TV 역내 간접수입제한 연장

프랑스정부는 최근 EC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한국산 카라디오 및 컬러TV에 대해 역내 간접수입제한을 연장키로 하였다. 그 근거가 되는 EC조약 115조는 EC공동관세가 실시된 이후 특정물품이 여타 회원국을 통해 과다수입되어 자국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여타 회원국을 통한 간접수익을 금지하는 일종의 세이프가드 조항이다.

이번의 연장조치는 동품목에 대한 간접수입 제한조치가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서, 카라디오의 경우 간접수입 허용물량은 금년 12월 31일까지 410,000대, 컬러TV의 경우는 금년말까지 40,000대로 되어있다.

대상품목의 CN코드는 카라디오의 경우는 8527-2110, 2190, 2900이며, 컬러TV는 858-1040, 1060, 1061, 1069, 1071, 1073, 1075, 1078, 1080, 1091, 1098 등이다.

한국산 동제품의 '90년 수출실적은 EC의 경우 270백만불, 프랑스는 27.4백만불이었으며 금년 5월말 현재 대프랑스 수출실적은 15백만불(대EC는 119백만불)에 이르고 있다.

동건 이외에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회원국별 간접수입 제한품목은 다음과 같다.

—스페인 : 면직물, 인조섬유직물, 편직셔츠, 쉐타, 합섬인조섬유직물, 인견직물, 플라스틱코팅직물, 합성직물, 모조장신구, 자동차, 완구류

—프랑스 : 면직물, 직조셔츠, 방풍복, 파일직물, 카라디오, 컬러TV

—아일랜드 : 블라우스, 스커트, 여성양복
—이태리 : 면직물

참고로 EC는 '88년에는 8개품목, '89년에는 10개품목, '90년에는 9개품목의 한국산 제품에 대해 역내 간접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

11. EC, 한국산 VCR 반덤핑 재심움직임

EC측의 덤핑규제로 '89년 2월부터 가격인상 약속(Price Undertaking)하에 수출되고 있는 한국산 VCR이 수출가격조정 협의과정에서 통상적인 연례재심이 아닌 반덤핑재심 채택을 주장하는 EC측의 입장표명으로 대EC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89년 2월 EC집행위측과의 가격인상 약속 협의시 합의된 내용을 보면 시황이나 생산여건 등이 변화할 경우 최소 1년을 단위로, 협의를 통해 수출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90년 7월에는 시황변화에 따른 1차 가격조정(215ECU → 198ECU)이 이루어진 바 있다.

'89년 2월 EC집행위측과의 가격인상약속 협의시 합의된 내용을 보면 시황이나 생산여건 등이 변화할 경우 최소 1년을 단위로, 협의를 통해 수출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90년 7월에는 시황변화에 따른 1차 가격조정(215ECU → 198ECU)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금년도 우리업계의 재가격조정 신청에 대해서 집행위측은 덤핑재심(Review)절차를 제시하고 있는데 EC측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이번에도 가격조정 협의결과 가격인하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보다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공식적인 재심절차를 이용함으로써 가격조정시기를 늦추려는 의도가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EC의 반덤핑 재심(Review)은 환율, 가격변동 등 국내 및 수출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덤핑수준이 변동되는 경우 집행위, EC회원국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개시되며 관보공고, 질의조사, 현지조사 등 덤핑조사절차와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생활은 검소하게 소비는 알뜰하게